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vol.648, November 2020

11



국회보

[표지이야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늦가을을 알리는 상강이 찾아왔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48, November 202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11월 2일

발행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박기현 간사(문화소통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독일 2개국 취임 첫 공식순방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코로나19 위기 속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실시
'수소전기버스 시승식' 개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취임 100일 인터뷰
국회 소통관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특집 2021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 22 혁신과 포용의 국민 행복 예산으로_ 정성호 위원장
- 24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 추진하는 2021년 예산안_ 박홍근 간사
- 26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2021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_ 추경호 간사
- 28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2021년 예산안_ 안도걸
- 32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_ 김일권
- 34 확대된 재정지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계돼야_ 김학수
- 36 코로나19로 세수 전망 불투명, 정책 효과성 높여야_ 김우현
- 38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재정 역할 중요,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_ 강인수

40 길에서 길을 찾다_ 조해진 의원

천혜의 자연·문화유산 갖춘 보고(寶庫), 밀양·의령·함안·창녕

44 칭찬합시다_ 이개호 위원장

"가슴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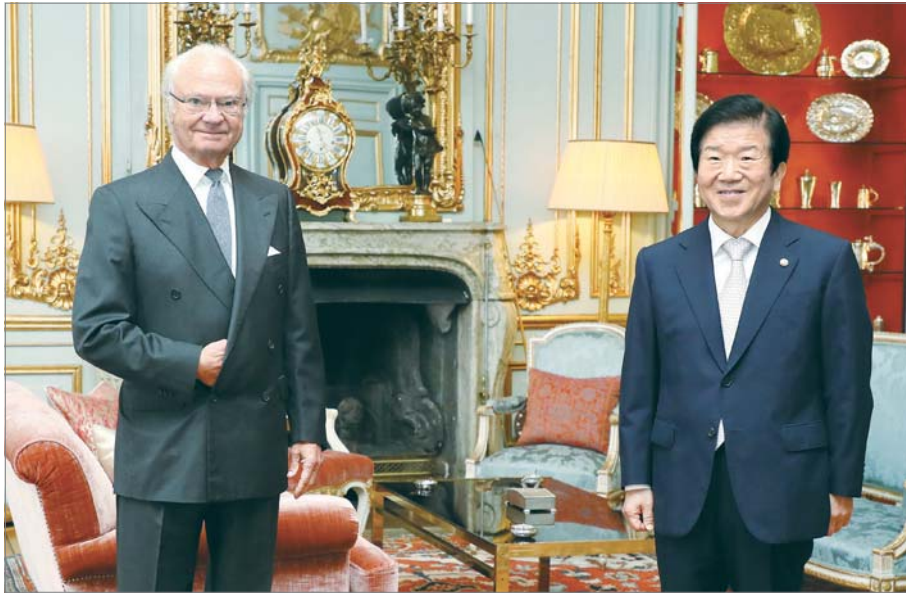


- 46 **의원의 좌우명_ 백종헌 의원**
“약속의 정치인으로 국민 받들고, 지역발전 이룰 것”
- 48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권인숙 의원**
“성평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 50 **법률 시대를 읽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_ 신항진
- 52 **주재관 리포트**
캘리포니아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동향_ 남궁인철
- 55 **국회스케치**
- 56 **법 시행 그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58 **기고**
기후재앙 막기 위해 빠르고 과감한 변화 필요_ 김근식
외교통일위원회 첫 재외공관 영상 국정감사 실시_ 정혜인
- 62 **만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위원회는 지금**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실시
- 74 **입법의 현장**
“국회 정보서비스 비대면 온택트, 지능형 기술로 혁신 중”

- 76 **이슈&이슈**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방향_ 민용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의 자기주도성 확립이 우선_ 김진숙
- 80 **국회 뉴스**
- 87 **생활 속 우리말글**
보조 용언 바르게 쓰기_ 김형주
- 88 **국회 사람들**
보좌관,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는 경험_ 이준우
- 90 **청년에게 듣는다**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 만들어가는 ‘멘토리’_ 권기효
- 92 **과학을 읽다**
금성에 생명체의 흔적이?_ 고호관
- 94 **경제이야기**
왜 디지털 화폐인가_ 이진우
- 96 **역사 속 길을 찾아**
은행나무 단풍길로 떠나는 시간여행_ 장태동
- 100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170년 동안 이어온 감동의 스토리, 김정희 ‘세한도’_ 이광표
- 103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독일 2개국 취임 첫 공식순방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스웨덴 첫 방문, 독일 연방대통령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박 의장은
스웨덴을 방문한 첫 번째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28일 만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록됐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방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공동 대응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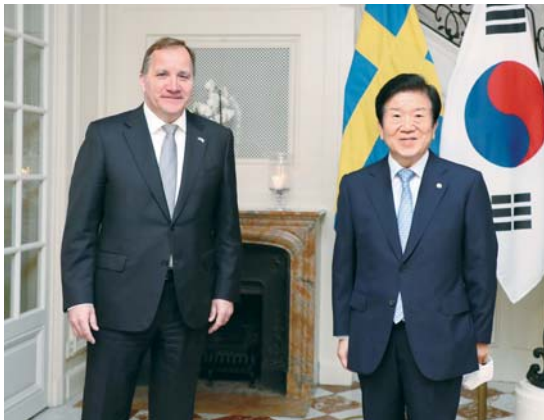
코로나19 공동대응·경제협력 논의

박병석 의장은 9월 27일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스웨덴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 닿는 곳에 우

리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며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을 잇는 중요한 다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9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을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박 의장과 구스타프 국왕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대화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스타프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훌륭하



9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월 29일 박병석 의장이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응상황에 관심을 보였고, 박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한국과 스웨덴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구스타프 국왕 예방을 마친 박 의장은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유명희 후보자에 대해 “통상분야 전

문가이며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협상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사무총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할베리 장관은 “유명희 후보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이 함께 협력 분야를 찾아가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양국 경제인들이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할베리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 완벽한 매치이자 성공 스토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양국의 아이



디어를 교류하자”고 화답했다.

9월 29일에는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총리 관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면담했다. 박병석 의장과 뢰벤 총리는 양국이 코로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약회사와 협력해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만큼 한국과 스웨덴도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뢰벤 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대처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보건당국에 코로나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뢰벤 총리 등이 ‘워싱턴포스트’지에 실은 기고문을 언급하며 “뢰벤 총리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뢰벤 총리는 “전 세계가 단합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UN 사무총장과 통화했는데 이런 구상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며, 북한을 흡수 통일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런 뜻을 북한에 잘 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후 박 의장은 스웨덴 국회를 방문해 안드레

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어도 우리 의회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합의가 지속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쟁불용, 평화체제 구축, 남북 공동번영을 남북관계 3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회담을 마치고 박병석 의장은 노를리엔 의장과 함께 스톡홀름의 유르고덴 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헌화를 마친 박 의장은 스웨덴 국회에서 노를리엔 의장과 30분가량 단독회담을 가졌고, 스웨덴 국회의장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스웨덴 일정을 마쳤다.

독일 공식 방문…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쇼이블레 하원의장 면담

독일로 건너간 박 의장은 9월 30일 독일 대통령궁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과 면담을 시작으로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등 외교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에게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체제 전환 제안과 의장의 남북 국회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지만 비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30일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남북관계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역사문제와 경제의 두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일본은 차이가 있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장은 유대인 대학살 추모비를 돌아보고 이어 독일 연방의회로 이동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하원의장을 공식 면담했다. 박 의장과 쇼이블레 독일 하원의장은 남북대화가 곧 한반도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장은 “북한이 양국 간 교류와 접촉을 금지시킨 상황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고, 나도 국회의장으로서 조건 없는 국회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하원의장은 “한반도 분단과 독일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북 교류와 국민 간 왕래를 추진하는 것이 통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30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하원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월 1일 독일 포츠담 통일 엑스포를 방문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상원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일 박 의장은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이트케 의장은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박 의장은 면담 도중 브란덴부르크주 공영 라디오방송과의 즉석 인터뷰에서 “30년 전 통일을 이룬 독일이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줬는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독일 국민에게 인사를 전했다.

박 의장은 10월 2일 베를린 장벽지구 등을 시찰하는 것으로 공식순방 일정을 마쳤다.

스웨덴·독일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집행 정책 기조를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위한 정부 시정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7월 16일 제21대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4년째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

설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



는 나라가 되고 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며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기업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 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지원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 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어 생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의장석에 앉아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면서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연설을 마쳤다. 🏠

코로나19 위기 속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실시



코로나 시대 국감

- ❶ 10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이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❷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❸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장시찰에서 광주비엔날레 5·18 40주년 특별전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 ❹ 10월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육군 드론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는 10월 7일부터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단, 겸임위원회는 별도로 국감을 실시했고(국회운영위원회: 10월 29~30일, 여성가족위원회: 10월 27~28일)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2020년도 국감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감(국방위원회 제외)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이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7개이며,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피감기관의 업무 집행 실적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검찰 개혁 및 검찰 인사, 재정 건전성 문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원전문제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경찰개혁 및 집회 대응, 체육계 폭력문제, 장마·태풍에 따른 농산물 값 폭등, 한국판 뉴딜,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상황, 취약노동계층 처우 개선, 부동산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히 준수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국감에서는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

고강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됐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9월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고, 9월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국감장 내부 및 대기 장소의 일일 출입등록 인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됐고, 대다수 상임위는 현장 국감 일정과 피감기관 증인 신청 숫자를 대폭 줄였다. 언론도 공동취재단(풀기자단)을 운영하고, 국감장 주변 대기자들도 거리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감장 안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관례적으로 국감을 실시하지 않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했다. 피감기관을 분산해 국회 밀집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이밖에도 국회는 국감장의 마이크를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국감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고, 외부 국감장으로 이동할 때는 되도록 버스가 아닌 개별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국회 외부에서 열리는 국감도 대폭 줄였다. 불가피하게 버스를 이용할 때는 최대 20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영상 국감’을 실시했다(10월 26일 기준). 보건복지위는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



10월 5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김영춘 국회의사총장(왼쪽 세번째)과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조용복 사무차장, 전상수 입법차장, 송대호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법제실장(왼쪽부터)이 박수를 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13일, 기획재정위는 16일, 정무위는 19일, 국방위는 26일에 각각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외교통일위는 10월 12일과 14일, 21일에 국회에서 영상으로 22개 재외공관을 연결해 국감을 실시했다. 외교통일위가 해외 현지 국감을 취소한 것은 제14대국회(당시 외무통일위원회)에서 해외 공관에 대한 국감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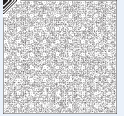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감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과 방역 조치 사항을 종합, 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관 704호실에 운영했다.

또,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1일 '2019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10월 5일에는 16개 상임위(국방위원회 제외)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0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은 대국민 정보 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했다. 각 상임위가 채택한 국감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 상임위별 일정도 각 상임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국회를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버스 시승식’ 개최



10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등이 수소전기버스에 시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는 10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수소전기 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에 최초로 도입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특수

목적 차량이 수소전기버스로 도입된 사례는 있지만, 현재 지자체가 시내버스 등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국가기관이 도입한 것은 국회가 처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이윤규 현대자동차 상무,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왼쪽부터).

“수소경제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박병석 국회의장은 “작년에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데 이어 금년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과 호주의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한 국가가 아닌 초국경,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 국회가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수소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는 국회 경내 셔틀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 국회

한편 국회의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이 1호로 도입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로, 1회 충전으로 434 km 주행이 가능하며, 13분 만에 충전을 완료(상용 충전소 기준)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춰 1시간 주행 시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린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탑승자 쪽으로 차

체를 7~8cm 기울일 수 있는 닐링시스템도 갖췄다.

작년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완료한 국회는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시승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 비서실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 국회 관계자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

“국민에게 꾸준히 도움 되는 ‘유산균’ 행정 추진할 것”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취임 100일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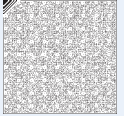


10월 6일 국회방송 ‘뉴스N’에 출연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10월 6일 국회방송 (NATV) ‘뉴스 N’에 출연, 취임 100일간 추진해온 중점 과제와 앞으로 국회사무처의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난 100일 동안 국회의 보이지 않는 공간과 기능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



에게 더 잘 알리고, 더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늘 강조하고 스스로 유념하는 것이 ‘유산균’ 같은 행정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 몸에 바로 작용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도움이 되고 신체의 활력을 높여주는 유산균처럼, 국회사무처도 관행을 타파하는 행정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디지털 국회 혁신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김영춘 총장은 ‘유산균’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국회 혁신 작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 국회 혁신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들이 국회에 쉽게 접근하고 국민의 요구를 입법화하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유산균처럼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김영춘 사무총장은 “국회는 하루 출입인원만 5천 명 이상이고 국회의원들은 전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의원들 간에도 긴밀한 접촉이 이뤄지다 보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매우 크다”

며 “취임 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방역 매뉴얼을 정교화하고 비대면 온택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아울러 국회 포털사이트 개편과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국회 홍보 계획을 밝히며, 국회방송의 경우 미국의 C-SPAN 채널처럼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은 ‘뉴노멀 시대’에 맞추어 영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어떤 국회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김영춘 총장은 “국회 망치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는 이색적인 포부를 밝히며 “국회 내 디지털 통신망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망, 국회의원과 사무처 간의 소통망 등 다양한 망을 치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국회는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을 더욱 긴장하며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좋은 정치를 만드는 힘은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과 참여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국회를 더 사랑해주시고 질타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국회 소통관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국회 소통관’

‘국회 소통관’이 국토교통부·(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준공건축물 부문 사회공공부문 올해 대상작에 선정됐다.

최윤경 심사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올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하나의 건축물이 건축사, 건축주 그리고 시공자들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노력과 협력의 과정을 얼마나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맞추었다”고

말했다. 국회 소통관의 설계를 맡았던 김태만 해안건축 대표이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엄숙하고 권위적인 공간을 탈피해서 소통과 변화의 공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수상작 전시는 11월 18~21일 서울 코엑스 B1홀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은 11월 1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열린다. 🏆



특집

2021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처, 그리고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혁신과 포용의 국민 행복 예산으로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 추진하는 2021년 예산안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2021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2021년 예산안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확대된 재정지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계돼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로 세수 전망 불투명, 정책 효과성 높여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재정 역할 중요,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혁신과 포용의 국민 행복 예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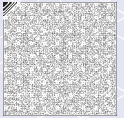
지난 9월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세입경정과 ‘한국판 뉴딜’을 담은 3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2개월 만으로, 뒤이은 4차 추경안이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인 시점이었다. 결국 9월 22일 7.8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가결됐고, 그 결과 올해 총지출 규모는 554.7조 원으로 증가해 내년도 예산안 555.8조 원 대비 -1.1조 원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또한 국가채무는 846.9조 원으로 GDP 대비 43.9%까지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 규모가 4차 추경 대비 0.2%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며 정부가 과연 ‘확장적 재정 기조’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전년도 본예산(39.8%)보다 무려 6.9%p나 증가(46.7%)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OECD는 지난 8월에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확정적 재정정책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2차 추경 때 지역화폐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2/4분기 민간소비 증진 효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정성호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면, 지역화폐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내수 중심의 하방리스크에 발 빠르게 대처한 재정당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형 재정운용 목표, 적실성과 유연 안정성

매년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도 역시 재정건전성이다. IMF와 OECD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권고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부채비율의 적정관리 등 보다 강화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경직 재정준칙은 정부의 경기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준전시상황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생산,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회복시켜야 하며, 나아가 과감한 재정투자로 신산업육성의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운용 목표는 명확히 하되, 적용은 유연성을 두는 기준이어야 한다. 입법이지 표명이 꼭 불가피하다면, EU처럼 경제위기 시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재정준칙이 정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한선을 면제하는 조항(escape clauses)을 두어야 옳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필수다. 국회가 재정수지의 '유연 안정성' 논의를 통해 우리 여건에 적실한 방안을 도출해내기 바란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절감 추진도 강조돼야 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리는 실태다. 구시대적인 재량규제와 불공정한 시장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민간의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제안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선 지역현장의 타당한 수요가 소외되거나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부안 제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마친 사업들도 있을 것이다. 꼼꼼히 챙기는 게 국회의 소임이다.

미증유의 체제 전환기, 여야 협력은 필요조건

지난 9월 유로화 외평채가 비유럽국가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됐다. 선도국가라는 미국과 영국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가가 됐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일상화된 현재는 누가 뭐라 명명하던 체제 전환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뉴노멀'인 시대, 국민 행복은 플러스인 미래기획은 과연 불가능한가.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류경제학 이론의 도그마를 뛰어넘는 '미래'기획, '혁신'재정이 절실하다.

지난 9월 22일 국회는 4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여야 원내지도부, 위원장, 간사 간 합의조정안이 당일 처리된 경우도 사상 '최초'였다. 물론 한해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1961년 이후 59년 만이며, 도합 62.4조 원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미증유의 코로나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의 합심협력은 필요조건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지금은 여야가 맞들어야만 건널 수 있는 대전환기다. 4차 추경 심사 때 보여준 여야 간 대화와 협력, 설득과 타협의 모습이 11월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 추진하는 2021년 예산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은 전 세계경제를 큰 충격과 어려움에 빠뜨렸다. 우리나라 또한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 어려움이 심화됐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의 취업자 감소폭이 개선되지 않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들어 1961년 이후 최초로 1년에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 또한 올해의 적극적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555.8조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12.3조 원에서 8.5% 증가했다.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그간의 위기대응 성과를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성장 경로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박홍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속한 경제 회복에 매진

따라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 경제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충실하게 담겨있는지를 중심으로 심



사할 예정이다. 통상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진작 목적의 재정 프로그램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구조 변동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를 충실히 지원하고,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해 선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가 큰 농수산물·문화·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효과성을 높이 고자 했다.

사회변화 선제적 대응 위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2021년 예산안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우리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돼, 소비·교육·근무환경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촉진됐다. 이와 동시에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도 증대됐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우리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다. 내년 예

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1.3조 원을 반영했다. Data, Network, AI(D.N.A.), 비대면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그 핵심이다. 국회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구조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 육성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도 2018년 11.7%, 2019년 11.3%, 2020년 12.1%에 이어 2021년 예산안 또한 10.7%로, 4년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의 경우 역대 최초로 200조 원 수준을 복지 분야 지출에 투자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런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 국가채무는 46.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일시적 재정건전성 약화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경기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재정의 적기 투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 경로로 빠르게 복귀하고,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다시 도약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와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2021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우리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다. 과거 조선업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산업·고용 위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제한하고 삶의 터전마저 앗아가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5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며,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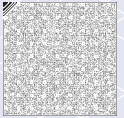


추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가채무 위험수위에 달해

우선 국가채무 급등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8조 원 중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9.7조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 빚대어 설명하자면, 수입보다 지출할 금액이 약 5분의 1가량 많아 부족한 만큼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빚은 이자를 동반하게 돼 지출을 줄이든가 또다시 빚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대폭 축소하게 되고,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21년 40%에 도달한 후, 2023년까지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슬그머니 내년도 예산의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증가시켜 2024년에는 58.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 정부 임기 이후에나 60%로 관리하겠다는 맹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재정준칙은 차기 정부의 재정 여력을 대폭 줄여놓아 단 한 번의 경제적 충격만 오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최우선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답습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 적자국채 89.7조 원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문제점

둘째, 한국판 뉴딜사업의 문제점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경우 과거 정부의 4차 산업혁명사업이나 산업계의 자동화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사업명에 AI, 디지털 또는 스마트만 붙으면 디지털 뉴딜로 재포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을 말하면서 아직도 추진 방법은 70년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어, 결국 디지털 뉴딜에 국가만 있고 민간은 사라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항을 무인차량·원격 크레인·자동항만관리 등을 통해 완전 자동화하겠다고면서 이에 따른 항만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또한 현 정부는 공무원 17.4만 명 증원만 해놓고 디지털 뉴딜로 공무원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를 감축

하는 계획은 없다.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산사태, 불안정한 전력 수급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강제적인 탈원전 추진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뉴딜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책 예산을 배제한 채 추경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액은 총 42.4조 원이다.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종식을 가정하여 편성했으나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대책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예산심의과정에서 21.3조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대폭 조정해 코로나 지원예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결손이 우려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2%로 가정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OECD는 -1.0%, KDI는 -1.1%, IMF는 -1.9%로 예측하고 있어 낙관적 경제전망에 기초한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안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국가의 한 해 나라 살림은 현재 상황과 미래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조화시키는 결과의 산물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2021년 예산안

“선발제인(先發制人), 후발제어인(後發制於人). 위기상황에서 선 제적으로 일을 도모하면 승리할 수 있고, 적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남에게 제압당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단순한 전염병의 확산이라기보다는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에 기인하고, 또한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의 가속화와 맞물려 문명사적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함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질서에 앞서나갈 수 있는 혁신적 국가발전 전략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안도걸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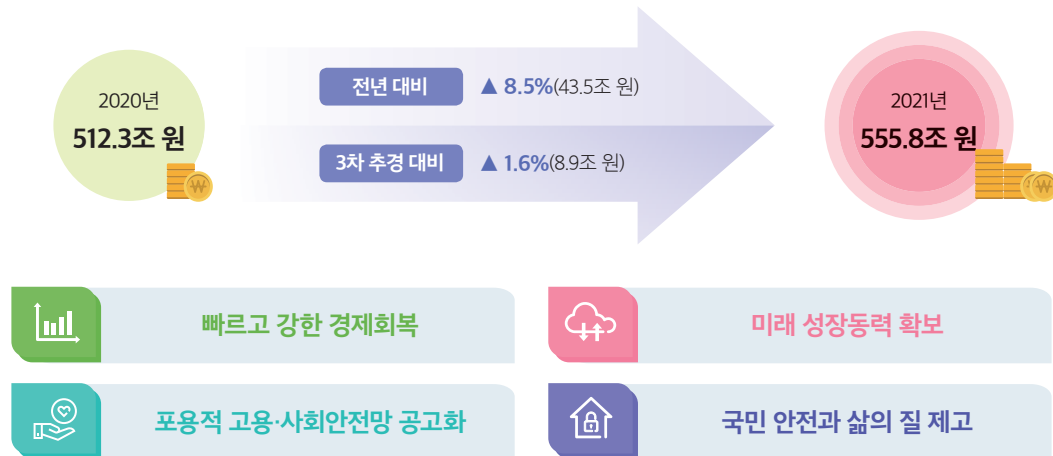
2021년 예산안 총량 및 기본방향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화두를 담아 총 555.8조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작년 대비 8.5%가 늘어난 규모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경제회복과 미래를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기본 방향하에 편성했다. 2021년



2021년 예산안 총지출



예산안은 우선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이끄는 ‘경기회복 견인 예산’,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그리고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국정성과 체감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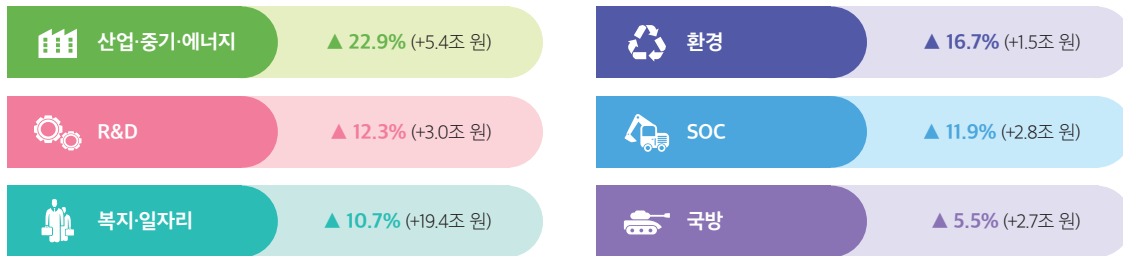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과 빠른 경제회복

우선, 내년도 예산안 최우선 전략과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그중 내년에는 국비 21.3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댐’

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교육·의료·기업활동 등 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의 혁신적 비대면 기술·제품·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 7.9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자율주행 등에 활용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는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9조 원을 계상했다.

둘째로는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에는 8조 원을 계상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천동, 공공임대주택 8만 2천 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전환하는 한편, 아파트 225만 호에 대한 스마트 전력량계를 보급하는 등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한다.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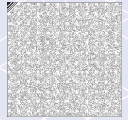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격차 및 실업불안을 최소화하는 등 혁신의 과실을 고르게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을 통한 인재양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5.4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그린 뉴딜의 양대 축을 견고히 뒷받침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부터 조기회복을 위해 일자리 유지·창출과 민간소비·투자·수출제고 등 전방위적 경제 활력제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45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중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57만 개 창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 개 등 일자리를 200만 개 이상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에 8.6조 원을 투입한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커 지자체 수요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18조 원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가 큰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에 2조 원 규모, 소비를 유도하는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에도 0.5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을 전년도 다 18조 원 이상 늘어난 72.9조 원을 공급하고, 공공부문에서도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6조 원을 반영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안전망 공고화

우리나라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R&D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BIG3,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R&D투자를 24.2조 원에서 27.2조 원으로 12%이상 확대했다. Data, Network, AI분야 생태계 조성에 3.1조 원을 반영하고, 미래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산업(BIG3) 육성에도 4조 원을 투입했다. 한편 소재·부품·장비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 품목을 대일본 100개에서 대세계 338개로 다변화하는 등 주력산



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5.5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경제·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9조 원을 투입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건강보험·요양보험 국고지원 규모도 10.2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확대 실시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소요예산 0.8조 원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내년 신규 가입이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46.5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80% 신규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 투자도 확대했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위기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K방역의 고도화·세계화·산업화에 1.8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위험요인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7조 원 규모를 계상했다. 마지막으로, 핵심기술 개

발 및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 국가안보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예산 52.9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병(兵) 인건비 및 급식비 피복비 단가 인상, 병사 군 단체보험 신규지원 등 ‘장병사기진작 7종 패키지 예산’도 3.8조 원 반영했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 추진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지출소요와 함께 세수 증가 둔화세가 겹치는 어려운 재정상황인 만큼, 예산이 한 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효율성 제고 노력도 기울였다.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도 고통을 분담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신규 핵심 소요에 전환하여 투입했다.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에 기민히 대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긴밀한 협업과 조율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제출한 만큼, 이제 국회의 심사와 확정을 통해 예산에 숨을 불어넣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선도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길 바란다. 🍷

재정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정부는 지난 9월 3일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10월 28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동시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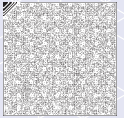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55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해 최근 2년간(2019년 9.5%, 2020년 9.1%) 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수입은 483.0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쳐 2014년($\Delta 0.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관리재정수지 적자($\Delta 109.7$ 조 원) 및 국가채무 규모(945.0조 원) 모두 역대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극적 재정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과감한 선제 투자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를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위기는 경제 내적 요인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외생변수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속기간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 위기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의 역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할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요구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 번 완화된 재정기조를 다시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예산안 심의 시에는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재정수입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투입이 미래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분야별 심의 착안사항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의 주요 정책분야별 심의 착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및 저성장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2019년 4.0% → 2021년 5.2%)와 R&D 분야(2019년 4.4% → 2021년 4.9%)의 총지출 대비 비중을 확대해 왔다.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는 재정투자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의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에 대한 중점 심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회 심의 시 특정 사업 지원대상이 정부 중점투자방향과 부합하여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해당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또는 경영여건 등의 재정지원이 기술 사업화, 민간투자 촉진 등 최종 성과로 이어져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고용 분야 또한 최근 총지출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2017년 32.3%→2021년 36.0%).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완화하는 단기적 기능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사회구조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원정책 패키지가 소득보조와 함께 교육·일경험 등 개인의 역량강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신규 발생할 지원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의 역할을 지속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뿐 아니라 재정수입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요 수입과목의 미수납·불납결손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각 부처 소관 조세지출·국유재산특례지출 등 재정수입 감면의 내역 및 규모는 적절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일시적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이 단기 경기대응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도 중요한 편성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회 심의 시에도 예산안이 정부가 제시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부합하는지 중점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확대된 재정지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계돼야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여건을 확장적 재정으로 돌파하며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의 소비를 축소하면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타당성은 미래세대의 소득을 증대시킬 성장잠재력이 보다 확충될 때 부여된다. 확대된 재정지출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현 세대를 위해 미래세대의 소비를 축소하면서 확대한 국가채무를 현 세대들이 어떻게 갚을지 고민해야 한다.



김학수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경제성장 촉진 및 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는 한국판 뉴딜 5개년 사업의 첫해인 내년 재정투입은 21.3조 원에 달하고 2025년까지 총 114.1조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내년 사업구성을 살펴보면, 저유가 시대에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그린뉴딜에 8조 원이 투자된다. 또한 안전망 강화 5.4조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인 4.7조 원이 기존 복지체계 보완에 배분되어 있다.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직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는 디지털 뉴딜 7.9



조 원과 사람투자 0.7조 원으로 전체의 약 40% 수준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기존 복지체계 보완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사업에 더 큰 투자 비중을 싣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녹색성장 등 효과성이 크지 않았던 선례를 다시 잘 살펴보고 한국판 뉴딜 예산이 효과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계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유·무형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필요

이번 세계개편안으로 신설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업종 간 차등지원을 축소하고 투자유인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투자를 우대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 목표를 위한 긍정적 제도설계로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 수준에 불과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설제도에 의해 추가적으로 유발되는 조세지출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이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성장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유형 자산 투자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신설제도가 갖는 아쉬운 부분이다. 대표적 무형 자산 투자인 R&D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대기업 지원수준은 2016~2018년 OECD 평균 지원수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

면, R&D 투자가 기업의 시장성과를 평균적으로 제고하는 경우는 대기업 R&D투자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 재원의 일부를 축소해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 경제 특수성 고려한 재정건전성 기준 설정 필요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일 뿐, 단기적으로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확대된 재정지출로 인해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2024년까지 경상 GDP 대비 5%중후반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담고 있다. 또한 장기재정전망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적절한 근거도 없이 2045년 10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까지 81.1%로 축소되는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경제위기, 인구고령화, 남북통일 등 우리경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만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위기를 겪으며 재정건전화에 실패한 국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을 벤치마킹하며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을까?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언제부터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국민에게 전해지기를 희망한다. 🍵

코로나19로 세수 전망 불투명, 정책 효과성 높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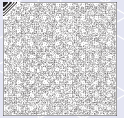
2021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이 높다. 높은 불확실성은 가까운 미래의 재정운용 환경조차 확실하게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확실한 근거의 부재는 불충분한 정보를 불안정하게 활용해 재정정책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일련의 주장을 펼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내고 비교적 뚜렷하게 빛을 내는 몇몇의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 조심스럽게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득 및 소비활동 위축, 치밀한 재정정책 필요

비교적 확실한 첫 번째 현황은 국세수입의 부정적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세목에 전체 세수의 상당부분(2019년 기준 77.2%)을 의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소비 활동 위축이 내년까지 지속되어 소득세·부가가치세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1년 예상 명목 경제성장률은 4.8%로 가정됐으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2021년 예산안에 제시된 예상 세수입보다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우현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편, 법인세의 경우 2020년 법인 영업 상황이 2021년의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6~2018년 호조세를 보였던 법인세 수입은 2019년 37.04%의 법인 영업이익 감소(2018년 대비)로 인해 정체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20년은 법인 영업활동이 더욱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발표한 ‘202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12월 결산 상장법인 690사의 영업이익은 42.7조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56.3조 원 대비 약 24.18%(연결기준) 감소했다. 2020년 1분기의 영업이익 19.5조 원에 비해 2020년 2분기의 영업이익은 23.2조 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연말까지 법인 영업이익의 극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둘째,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및 한국형 뉴딜로 대표되는 재정 지출 계획은 앞선 세수환경 변화와 맞물려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투자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R&D 분야 투자의 높은 관심이 2020년에 이어 2021년 예산안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산안에는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악화가 관찰되고 있다. 앞선 언급처럼 경제성장률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적정 국가 부채 및 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견해와 관계없이 중기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과거보다 빠르게 악화되는 점은 실재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령화 및 사회보험 재정 악화 등 재정수지의 하방 압력요인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판 뉴딜은 향후 5년간 국비 114.1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이며, 정책 목표인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 창출은 미래 재정운용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의 대전환 및 인간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부계획 수립과 전달체계 점검, 정책 효과 평가 및 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19년 새해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당시 미국의 그린뉴딜 논의를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은 옳지만, 이것이 그럴듯한 정책 구호(appealing slogan)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세부적인 정책 내용들이 꾸준히 논의되어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 계획들이 최적의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높아진 불확실성 덕분에 재정정책의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교적 확실한 몇몇 근거들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구호로서는 답답하고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 미래 재정 운용 환경을 결정할 거센 파도에 직면하여 답답할 정도의 신중함과 치밀한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효한 자세라고 믿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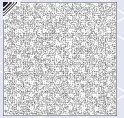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재정 역할 중요,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

2021년도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효과성, 국가채무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보강하며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5%(43.5조 원) 증가한 555.8조 원에 달한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경상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슈퍼예산이 편성됐다. 반면에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0.3%(1.2조 원) 증가에 그친 483조 원으로 2014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다.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로 10.4조 원(5.5%)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2조 원(△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악화된다. 실제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09.7조 원 적자(GDP 대비 △5.4%)로 추정됐다. 국가채무도 2020년 805.2조 원(GDP 대비 39.8%) 보다 139.8조 원 증가한 945조 원(GDP 대비



강인수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46.7%)으로 급증한다. 규모도 역대 최대지만 그보다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일자리와 민간소비 창출에 초점을 둔 경기회복견인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과 민간소비 창출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상품권과 소비쿠폰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 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 원 등 총 21조 3천억 원을 배정했다. 셋째, 방역 및 재난대비 예산 10조 원을 포함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에 약 2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과연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되면서 한국판 뉴딜 총예산 160조 원의 47%인 75조 3천억 원이 지역에 투자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편성이 일상화된 것도 문제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된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지출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상당 부분 구축했을(crowding out)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효

과는 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했던 것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정부 재정이 마중물이 아니라 화수분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내년 예산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재정 악화는 기업의 자금 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재원을 사용하더라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곳에 지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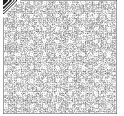
국가채무 증가 속도 관리해야

지금 당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아도 어떻게 비율과 속도를 관리하고 제어할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채무의 총량 자체가 커지는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한국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은 가장 중요한 지출증가율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준칙의 법적 지위 미비, 복합 산식의 불투명성, 불명확한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당면 현안이지만, 그로 인한 재정 악화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비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경남 밀양 영남루에서



천혜의 자연·문화유산 갖춘 보고(寶庫), 밀양·의령·함안·창녕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수려한 산세 속 빼어난 절경과 유서깊은 문화 유산이 곳곳에 자리한 경남의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곳을 지역구로 둔 조해진 의원은 제21대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여야 전체 득표율 1위, 전체 지역구 득표수 기준 3위를 기록하며 3선에 성공했다. 가을 햇살이 반짝이는 10월의 어느 주말, 조해진 의원을 만나 그의 지역 자랑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름다운 표충사와 영남루, 밀양

사계절 아름다운 밀양은 누각 영남루와 함께 얼음골과 표충비로 잘 알려져 있다. 천황산 북쪽 중턱의 얼음골 계곡은 한여름에 얼음이 얼고 처서가 지날 무렵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해 계절을 거꾸로 느낄 수 있다. 밀양시 무안면 홍제사에 있는 표충비는 사명대사의 뜻을 새긴 비석으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비석에 땀방울이 맺혀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영남 알프스’ 중 한 곳인 재약산에는 사명대사의 호국성지로 알려진 천년고찰 표충사가 있고, 표충사의 뒷길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역새 군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사자평을 만날 수 있다.

표충사를 둘러본 조해진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제가 더 주도적이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며 “저에게 정치는 ‘소명’이었다. 어릴 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저는 서울대 법학과 3학년 시절 여러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 공이 학교 옆의 논밭으로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 커서 정치인이 되면 꼭 운동장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제가 의원이 된 후 모교에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을 이룬 것이지요.”

조해진 의원은 박찬종 전 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권의 거목(巨木)을 잇달아 보좌한 후 제18·19·21대 국회 의원이 됐다. 바닥에서부터 정치를 배워 통찰력·추진력이 있으며, 점잖고 온화한 품성으로 ‘신사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천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누각인 영남루는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명루(名樓)로 일컫는다. 달빛 아래 유유히 흐르는 밀양강과 어우러진 영남루의 야경이 일품이라고 한다.

역사·자연·문화가 어우러진 의령, 함안

의령은 조선시대 전국 최초로 항일의병이 봉기한 역사적인 고장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의령 사람들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의령에는 유명 인물의 출생지도 많은데,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 생가와 의병장 곽재우 장군 생가가 자리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또 경남 중부에 있는 함안은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찬란했던 아라가야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이산고분군은 경남 가야고분군 중 최대 규모다. 지난 9월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



14:00



의령 곽재우 장군 생가



16:00



함안 말이산고분군 전경



창녕 우포늪



17:00

유산분과 심의에서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돼 2022년에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에는 탐방 안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누구나 시간·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고분군을 탐방할 수 있게 됐다.

태고의 신비 가득한 창녕 우포늪

창녕 우포늪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내륙습지로 1억 4천만 년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다. 1998년 3월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됐고, 2018년 10월 제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다.

조해진 의원은 “창녕의 자랑인 이곳에,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천연기념물 제198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를 창녕군이 지난 2008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복원·증식했고 2019년 따오기 야생 방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현재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주거안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력 저하로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방에도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이종배 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난 달 ‘청찬합시다’ 주인공이었던 이종배 의원은 11월호 주인공으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추천했다. 이 의원은 이개호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농어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 소개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종배 의원님은 행정고시 선배이자 행정안전부 등 공직을 함께한 동료 공무원이었고, 제19대국회부터 나란히 3선에 성공했다.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분에 넘친 칭찬을 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함께 잘사는 세상’ 위해 정치 결심

이개호 위원장은 대학 재학 중 만 21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라남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목포·여수·광양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공직생활 동안 제 꿈은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탁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총선에 출마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죠.”

이 위원장은 2014년 보궐선거를 통해 제19대국회에 등원, 20대에 이어 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 농림, 산업, 국토·교통 등 정책을 총괄했다. 제20대국회에서는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6월에는 181표 중 180표를 얻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관료와 의원활동 모두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춰온 ‘농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제20대국회에서 대표발의한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



에관한특별법) 통과를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꼽았다.

“FTA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매년 1천억 원씩 10년에 걸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농업·농촌·농어민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인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실질적인 법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재직시절 20년 전 수준까지 폭락했던 쌀값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만들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성공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더해 수해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을 살피면서 민생정치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득표율…호남 대표로 목소리 낼 것

이개호 위원장은 지난 4·15총선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호남 최다선, 한 지역구에서만 3선에 성공했다.

“득표율을 보면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요. 실제로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해왔고 열심히 준비해 발의한 법안이 최우수 법률로 선정돼 입법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틈날 때마다 지역구에 가는데, 지금도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내일 일정이 만나질 비어 민원을 들으러 갑니다. 높은 지지율이 어깨를 무겁게 하지만 호남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꺼내자 이 위원장은 “대나무 숲 담양, 나비와 국화의 도시 함평, 굴비의 고장 영광, 선비 고을 장성”이라고 노래처럼 읊으면서 지역구를 자랑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담양의 한국정원센터 설립, 함평의 빛그린산업단지 활성화, 영광의 e-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 최대 숙원사업인 장성의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태흠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개호 위원장은 다음 칭찬 주인공으로 “당을 떠나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추천했다. 김 의원과는 제20대국회에서 농해수위 여야 간사를 각각 맡아 손발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의원님은 어찌 보면 저와는 정 반대 성향으로, 직선적이고 때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지만 깨끗한 소신을 갖고 자신이 내건 약속에 대해서는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지요. 변함없는 성실함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더 큰 정치적 성장을 기대합니다.”

글. 윤성혜 사진. 김지범

금	석	맹	약
金	石	盟	約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약속의 정치인으로 국민 받들고, 지역발전 이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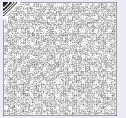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시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하며 16년간 지역을 지켜온 백종헌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뛰어온 백종헌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백종헌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금석맹약(金石盟約)’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쇠와 돌처럼 변치 않는 굳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평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금석맹약(金石盟約) 백종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왔습니다.”

정치 입문 전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던 백 의원은 당시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원칙이었다고 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회사 식구들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



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잘 지키면 상대방과 신의가 생기고, 그 신의를 바탕으로 또 다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과도 쌓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지역 기업의 고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백 의원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고민하다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2002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제 나이가 만 43세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청년들에게 정치 입문은 쉽지 않았습니

“생활정치로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파”

정치를 시작한 후 그는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지역을 살피고 있다.

“지역구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장으로, 공원으로, 거리로 나갑니다.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정치를 실천해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개선하고 좋은 정책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행복을 증진시키고,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인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것이 정치를 결심하면서 제 자신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백종현 의원은 4선 시의원 출신 국회의원이으로서 오

직 지역민만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민의 큰 성원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잘 구하라는 엄정한 뜻이라 생각하고, 그 명령을 잘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 발생 시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보건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야 60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하는 법률과 예산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의 현안과 관련, “금샘로 부산대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전 부산 침례병원을 정상화해 금정구민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의료생활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 약속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거리나 시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무거움을 더욱 절감합니다. ‘금석맹약’의 좌우명을 늘 기억하며 주민과의 약속 하나하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번복하지 않는 믿음직한 약속의 정치인으로 국민을 받들고, 부산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성평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출신의 권인숙 의원은 제21대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 교육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학자이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죄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의 삶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 시절 농촌활동 계기로 자기성찰

권인숙 의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문제의식이

많고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말씀을 잘 안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수업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차별대우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권위의식에 잘 도전하는 편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이 나중에 여성학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유명해지고 싶어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를 꿈꾸기도 했으나 대학 진학 이후 학생운동과 농촌



활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오만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받아왔다고 생각한 차별이 그곳에서는 기득권층의 배부른 투정이었던 것이다.

“대학 시절 농촌활동 등을 하며 자기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당시 군부 독재 현실보다 노동자들의 힘든 삶에 더 주목했습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때도 저의 성격과 기질 탓인지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보다 잘 헤쳐나갔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으니까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1986년 권 의원이 서울대 재학 시절 경기 부천시의 한 공장에 위장취업을 해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 수사받는 과정에서 성고문을 받은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은 배상금으로 1989년 노동인권회관을 세운 뒤 1994년 여성학 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났다. 미국 클라크대에서 ‘한국의 군사화된 여성의식과 문화’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남플로리다주립대 교수로 일했다. 권 의원은 “아이가 말이 좀 늦었는데, 주변에서 엄마가 공부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여성은 사회적 기준에 압도당한 채 살아간다. 모성(母性),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귀국 후 명지대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여성의 건강권, 결정권 위해 낙태죄 폐지해야

원래 정치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교수로 지내길 바랐다는 권인숙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

안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다”고 생각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수락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심이 많아 1호 법안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허용 임신기간이나 사유에 상관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신중단의 비범죄화로 청소년도 부모나 주변인과 빨리 의논하고 빨리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적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임신중단 여부를 왜 국가가 결정하지요?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건강권, 결정권, 생명권이 더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성평등 교육에 소극적이어서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선택했다는 권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이 성(性)을 불온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며,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가 잘 이뤄질 수 있게 성교육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성평등을 국가통치 원리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성평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성평등이 통치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코로나19 방역역량 제고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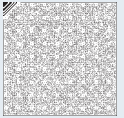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여파를 몰고 왔다. 지난 8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던 코로나19는 9월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연휴와 겨울철 독감 유행시기를 앞두고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확진자의 동선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방역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21대국회에서는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현장 대응인력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 50여 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이 중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7월과 9월 두 차례 개정했다.



신항진 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의 주요내용

감염병 유행으로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상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 등의 증상 유무와 위중한 정도, 의료기관 및 동원된 시설의 수용 여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과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시스템 등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였다.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지침 준수를 유도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는 일부 사례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시설에 대해

여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감염병 위기상황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감염병환자의 이동통선 공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공개 시에도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액 긴급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건물의 소독·식재료의 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업장 등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매달 손실보상 신청을 받아 일부를 개산(概算)해 지급하고, 손실보상액 확정 후 나머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캘리포니아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동향



남궁인철 LA주재관

시카고에서 시작하는 66번 도로(Route 66)를 따라 장장 2천400마일을 달려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만나는 곳, 캘리포니아. 1848년 골드러시 시기부터 2000년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까지 많은 미국인들에게 캘리포니아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왔다. 연중 맑은 하늘과 온난한 기후까지 더해져 캘리포니아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혔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거나 떠나고 싶어 한다. 2010년 이후로 캘리포니아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국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는 69만여 명인 반면, 새로이 유입된 인구는 50만여 명에 그쳐 19만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9년 이루어진 여론 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53%가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63%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부담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문제

높은 소득세 및 소비세율, 잦아진 자연재해 등도 원인이지만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 지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부담이다. 캘리포니아의 주거비 부담 수준은 하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미국 평균치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침실 2개를 갖춘 아파트먼트의 평균 월 임대료는 2천495달러인데, LA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대도시 권역의 실제 임대료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빈곤율과 홈리스(Homeless)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연방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12.8%로, 미국 전체



11.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별 주거비 및 필수생활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면¹⁾ 빈곤율은 17.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리스 문제도 심각하다. 2019년 미국 전체의 홈리스 인구는 56만 7천 명인데, 이 중 캘리포니아에 서만 15만 1천여 명이 거리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홈리스 밀집 지역인 LA 다운타운 스킵 로우 거리의 모습. 노상에 설치된 텐트와 대조되어 뒤편으로는 금융타운의 고층 건물이 보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캘리포니아는 2019년 11월 미국에서 두 번째²⁾로 주 단위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임차인 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B 1482)’을 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연간 임대료의 상한을 ‘5%+물가 상승률(합계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없을 경우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동 규제는 지은 지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먼트, 다가구주택)에만 적용되며, 개인이 소유한 콘도나 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통과를 전후하여 많은 반대 의견도 있었다.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임대 주택 공급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 규모가 축소되

어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차 전문 업체 ‘Rentcafe’는 자체 조사를 거쳐 2019년 LA 지역의 임대료가 10년 전에 비해 65% 상승했고 특히 지난 2년간 많은 임대료 상승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임대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임대료 규제법의 시행에 앞서 집주인들이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대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대(UCLA)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세입자 보호에 효과가 있으나 캘리포니아의 주택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 캘리포니아 공공정책 연구원(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과 스탠포드 대학 빈곤·불평등 센터의 공동연구에서는 주거비와 필수생활비 및 최소 공공부조 비용 등을 포함한 CPM(The California Poverty Measure) 척도를 사용

2) 미국 내에서 주 전역에 적용되는 임대료 규제 법안은 2019년 2월 오레곤이 최초로 제정했으며, 캘리포니아가 두 번째로 시행했음.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의 경우 주(州)법이 아닌 소속 카운티 또는 시 정부 차원의 조례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임차인 보호

캘리포니아는 10월 14일 현재 86만 8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만 6천769명이 사망해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주 정부는 팬데믹 초기인 3월부터 주 전역에 걸쳐 ‘주택 칩거 명령(Stay at Home)’을 발동해 대응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1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도 2월 3.9%에서 연평균 10.8%로 급증했다.

대량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인해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3월 16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방정부와 사법당국,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와 주택 소유주에 대한 강제 압류 등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주 의회는 8월 31일 ‘임대료 및 모기지 미납 유예법(Tenancy:rental payment default: mortgage forbearance: COVID-19, AB 3088)’을 제정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우, 세입자는 월 임대료의 25% 이상을 납부하면 2021년 2월 1일 이전까지는 강제 퇴거당하지 않

도록 보호하고, 소유주의 경우에도 모기지 미납에 대해 압류 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과 주법은 임대료를 직접 제한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지는 않고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납부 의무를 유예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을 조화시켰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보다 강화된 임대료 규제 담은 주민발의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진보 정치인 및 세입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현행의 임대료 규제 법만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주택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 정부가 직접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법보다 더욱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roposition 21(주민발의안 21)’³⁾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는 11월 3일 예정된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의 가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지난 2018년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발의안이 59%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3) 캘리포니아는 직접 주민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발안 대상은 주 헌법과 법률임. 발안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 법무장관에게 발의안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은 30일간의 웹사이트 게시를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주 정부가 지정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일정 기준(헌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8%, 법률 개정안은 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 투표를 거쳐 가부를 결정함.



국회에 내려앉은 늦가을

청명한 하늘과 곱게 물든 단풍, 조용히 내려앉은 낙엽을 배경으로 국회 사랑재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뿌려놓은 한해를 갈무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꿈의 공장’ 애니메이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목한 영상문화 산업으로, 파생콘텐츠 창출이 쉽고 관광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다. 미국 기업 디즈니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10위에 이른다(인터브랜드 2020년 조사). 한때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하청 받아 납품하는 곳으로 홀대당한 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이미 해외 영화제 등을 통해 인정받은 스토리텔링 역량 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한류 문화콘텐츠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산업을 지원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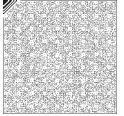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다룬 법은 없어,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김원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무국장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염원이던 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영화, 가요, 드라마처럼 국가경쟁력을 갖춘 K-애니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수적이었다”고 크게 환영했다. 법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꿈꾸다

특히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난



‘한국 키즈 콘텐츠 세계화 사례’로 꼽히는 타요, 에디, 핑크퐁, 뽀로로, 패티 등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왼쪽부터)

9월 출범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는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총 16명의 위원들은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애니메이션 관련 협회, 영화사 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2년 9월까지 2년이다.

2020년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0분짜리 애니메이션 ‘우주의 끝’으로 한국단편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병아 감독도 진흥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한 감독은 “애니메이션이 아동, 청소년의 전유물이라는 개념은 옛 말이 됐다. 최근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반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우리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문화적 가능성과 비전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는 감독으로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 그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지만 지난 9월 10일 첫 회의부터 애니메이션 관련 통계,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했다.

법 시행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 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용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 포함)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진흥위 위상 강화, 기금 조성해야”

김원규 사무국장은 “우리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발은 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애니메이션 진흥기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닌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진흥기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작비가 편당 1억 원이라고 하면, 방송사에서는 1천만 원 수준에서 작품 한 편을 구매합니다. 많은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캐릭터 상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제작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중국 등으로 수출을 많이 했지만 사드 사태 이후 그마저도 중단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만들어 규제, 등급, 저작권 등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글. 박민선

기후재앙 막기 위해 빠르고 과감한 변화 필요

- 국회사무처 친환경 국회 조성 실행계획의 내용과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킨의 말이다.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도,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대형 산불도 기후위기 징후다.

지난 5월 발표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4%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1.9%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20·30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자)를 중심으로 비닐·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친환경 제품 등 지속가능한 제품을 소비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근식 서기관
기획조정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업무밀착형 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

이에 지난 9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친환경 국회 조성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사무처가 작은 것부터 친환경 대책을 실천하고 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사무처의 각 부서는 65건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효과성·실행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쳐 총 19건의 ‘친환경 국



회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실행계획’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친환경 국회 조성 실행계획은 쓰레기 배출 감축 방안, 폐기물 관리대책, 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캠페인 활동 등 국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각도·다차원적인 방안이 망라되어 있다.

우선, 일회용품 등 절대적인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국회가 생산하는 다량의 문서 및 발간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문제가 연례적·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발간·접수하는 각종 발간물의 물량을 조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간행물은 전자파일로 공개·배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구내 카페에서 텀블러와 같은 개인컵 이용시 할인액을 20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해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고, 리드컵을 도입해 카페 이용과 관련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종이수건을 1장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무실에서 종이컵 및 페트병 생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둘째, 친환경적인 쓰레기 배출을 위해 구내 카페에 종이빨대·우드스틱을 도입하고, 경내에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회 조경에 자연 분해가 되는 자재를 활용하고, 직원들에 배부되는 업무노트의 연도표기를 삭제함으로써 속지교체만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설비(보일러, 냉온수기 등)를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대체하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기존 형광 조명기구를 LED 조명 기구로 교체하고 청사 내 LCD 게시판의 절전모드 운용 시간을 늘려 청사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친환경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우수 사례에 대한 국회방송 취재·보도, 친환경 의정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국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 실시를 통해 국회 내외를 아우르는 친환경 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정부부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 단체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국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파급효과는 다른 기관의 어떠한 노력보다 클 것이다. 특히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좀 더 노력한다면 나도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로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국회사무처의 이번 노력은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행계획이 단기간의 국회사무처 내부적 정책에 끝나지 않고, 전 국가기관과 국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확산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

외교통일위원회 첫 재외공관 영상 국정감사 실시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0월 주미국대사관을 비롯한 22개 재외공관에 대해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영상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가 1995년 제14대국회부터 해외 공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해온 이래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과 국가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10월 14일에는 하루 동안 주UN대표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18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미·중·일·러 대사관에 대한 감사는 주요 4강의 외교적 중요성을 고려해, 10월 12일에는 주미대사관 및 주러대사관, 10월 21일에는 주중대사관 및 주일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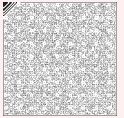
작년 재외공관 현장 국정감사의 경우 세 개 감사반(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이 13일간 각 7개 공관을 감사하며 1~2일에 한 번씩 국가 간 이동을 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영상 국정감사 방식을 통해 하루에 18개 공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었다.



정혜인 입법조사관보
외교통일위원회

영상 연결 통해 현지 감사와 동등한 수준의 감사 실시

그동안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생중계되지 않았지만, 이번 영상 국정감사는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국민들에게 다소 거리감이 있는 대사, 총영사 등 공관장과 실시간 연결을 통해 공관의 업무현황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번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영상 연결을 통해 현지 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은 주뉴욕총영사관, 주LA총영사관 등 여러 재외공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교민들의 피해상황 파악 및 공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고, 최근 독일 베를린시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일본의 조직적인 소녀상 철거 로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했던 태영호 의원은 주영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영국 탈북민 사회가 현지 한인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며, 주영국대사관의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영상국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상국감에는 Webex 영상회의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향후 타이머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기능 구비 및 비공개회의 개최 시 보안성 확보 등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첫 영상 국정감사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10월 2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영상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주중대사, 주일대사의 증인선서를 받고 있다.

위원들은 국가 간 이동 시간 절약으로 국정감사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재외공관은 외교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장 감사에 비해 현장감이 부족하고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의 파악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처럼 재외공관 영상 국정감사는 현지 인터넷 상황과 프로그램 상 일부 기능 미비 등 제약이 있지만, 국가 간 이동시간 절약 및 실시간중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장점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재외공관 영상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시간적·지역적 한계를 넘어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새로운 시도이자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처벌 받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9-22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2020-09-24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실시



교육위, 수능 정시전형 확대, 원격수업 등 논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0월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계획, 수능 준비, 원격수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추진하고,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취약계층 학생이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 에듀테크 멘토링, 소규모 대면수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준비와 관련, 유 부총리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1월 초부터 수능을 위한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홍수 부실 대응' 관련 환경부 질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올여름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기록적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댐 관리 등 환경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위원들은 “댐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아 급격히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집중호우 횡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 댐 관리 규정이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위, '대주주 3억 요건' 한목소리 질타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10월 8일 실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방침 수정을 요구했다.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위원들과 의견이 같다. 여야가 뜻을 모으

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 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여야의 비판이 계속되자 한발 물러섰다. “수정을 검토하겠느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논의한다면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수정을) 한다면 행정부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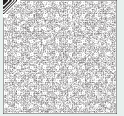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업지도선 공무원 희생사고 관련 질의

10월 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의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건이 쟁점이 됐다. 이날 국감은 이개호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실종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직근무, CCTV 등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행해 당직근무의 적정성, CCTV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 규정 정비, CCTV 교체·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의 조사와는 별개로 해수부 산하 서해 어업관리단의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가족을 직접 만나봤느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문 장관은 “아직 만나진 못했고 곧 만날 예정”이라면서 위문편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는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실종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21일 오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간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위, 국회-세종-오송 잇는 ‘영상국감’ 실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영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위치한 세종, 질병관리청이 있는 충북 오송을 3각 연계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의사일정 진행이 불가 피할 뿐 아니라, 방역당국이 국가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체계의 변화 여부, 역학조사관 증원,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방역체계 변화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양적으로 안정적인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와 관련, 박 장관은 “정부가 1년에 수백개씩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 중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그것도 사유가 응시자의 요구에 의해 거부된 뒤 재응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행정안전위, 여야 한목소리로 “울산 주상복합 화재 재발 방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10월 13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같은 대형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고층용 고가사다리차와 현장 출동 소방관을 위한 휴식 차량 등 소방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야 위원들은 “30층 이상 고층 건물 중 아파트가 다수인데 전국에 70m 이상 고가사다리차는 10대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에 대해 “고가사다리차는 충남에서 1대를 추가 구

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9개 시·도의 지역 본부에서도 보완하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 출동 소방관이 쉴 수 있는 ‘회복 차량’ 수를 늘리고 운영 규정도 만들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현장 출동 소방관을 위한 회복 차량은 중앙 119구조본부에 3대, 서울과 세종에 1대씩 모두 5대가 있고 올해 1대 더 도입된다. 이번 울산 화재 때는 장시간 진화작업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해 출동을 못 시켰는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주상복합 화재의 급격한 확산 원인이었던 가연성 외장재 등 건축자재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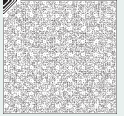
법제사법위,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논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조치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가 쟁점이 됐다.

여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강압적 감사 과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는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 심의가 지연된 이유와 예상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감사 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 의견을 담아서 최종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피감사인)의 진술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다그쳤다는 의혹에 대해 최 원장은 “감찰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KOC분리·도쿄올림픽 준비 중점 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10월 15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 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체육계 현안인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내년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체육회와 KOC 분리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앞으로 2~3년 동안 남북공동 올림픽 유치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 외교에 집중하도록 KOC와 체육회를 분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기흥 회장은 “올림픽 유치와 KOC 분리는 별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체육회와 KOC 분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IOC 헌장의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쿄올림픽에서 방사선 피폭, 욕일기, 독도 문제 등이 대한민국 선수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체육회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대한민국 선수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전략’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보고서의 취지가 선수 보호를 위한 연구가 아닌 체육회 위기관리 연구로 중간에 바뀌었다”는 비판에 이 회장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태권도가 계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태권도는 내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이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식 종목은 2021년 IOC 총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연구비 포함 530만~6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과 달리 선수들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다면, 훈련 수당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부동산 통계’, 전셋값 안정 등 논의

10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가 쟁점이 됐다. 야당 위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 위원들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토부가 통계에서 유리한 수치는 부각시키고 세부내용은 감추는 등 편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했고 여당 위원들은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전세 품귀현상’도 논란이 됐다. “전셋값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는 질의에 김현미 장관은 1989년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똑같이 5개월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서해 공무원 실종해역 현장점검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여야 위원들은 10월 19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 공무원 실종 지점을 방문해 현장 감사를 벌였다. 위원들은 군함에 승선, 연평도 주변 해역을 둘러보고,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부당통신’을 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면서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북측은 한국 선



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면 ‘이탈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공무원 실종 당일 우리 군이 북측의 부당통신에도 ‘실종자 수색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대응통신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실종자가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군과 해경이 NLL 이남 해역을 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측에 협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여야 위원들은 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지휘관들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격려했다. 위원들은 연평도 포격전과 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에 참배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 중국의 방탄소년단 비난 사태 등 논의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10월 21일 주중국·주일본대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중국의 방탄소년단(BTS) 비난 사태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여야 위원들은 BTS 굿즈(기획상품) 배송 중단 논란과 관련, 현지 공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관련 상황이 처음 보도된 후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했다.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윈다라는 업체가 공지를 올린 이후 두 업체가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어 직접 확인했는데 일단 중단 조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배출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단호한 액션플랜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 수산물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어민들의 천문학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우리 정부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안다. 대사관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10월 22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가보훈처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재계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계의 목소리도 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현재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가격·입찰 담합 등에 한해 누구든 고발할 수 있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20%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 “적용 대상에 총수일가와 관계회사만 넣고 계열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이 쉽게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평가부분의 평가점수가 현저히 하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 위원장은 “조직 역량과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논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쟁점이 됐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를 넘어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여당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



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은폐한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 전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 부처 국장과 직원이 444개 자료를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한 안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0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전날 김상희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의결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일본 정부에 권고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방사능 오염수 처리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주변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일본 정부 및 IAEA에 전달할 예정이다. 🍁

글. 박민선

“국회 정보서비스 비대면 온택트, 지능형 기술로 혁신 중”

국회는 최근 의원회관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에 비대면 온택트 회의시스템을 구축,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차질 없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보화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미란 입법정보화담당관을 만나 비대면 온택트 회의시스템 구축 등 국회의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국회 추진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Q. 김미란 담당관께서는 언제부터 국회에서 근무하셨는지요?

A. 저는 전산직으로는 처음 실시된 일반직 임용시험에 응시해 1991년부터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국회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데이터센터 구축, 대국민·의정지원·행정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2005년 전산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1년에는 국외교육훈련 과정에 선발돼 미국 퍼듀(Purdue) 대학에서 정보기술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5년 귀국 후 2019년 실시된 입법정보화담당관 직위공모에 지원해 국회사무처의 첫 전산직 과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김미란 담당관
입법정보화담당관실

Q.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은 국회의 정보화업무를 기획·조정·총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며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담당합니다. 또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정보화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사이버테러 예방·대응 등 정보보호도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입니다.

Q. 비대면 온택트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A. 입법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우선 기존의 영상회의실에서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는 신속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인프라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회관에 영상회의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본관의 인터넷망도 증속했습니다. 8월 말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관과 의원회관에서 다양한 규모의 테스트를 실시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는 김영춘 사무총장님의 지휘 아래 200명 이상 실제 접속 상황테스트를 실시했고, 의장님께서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보며 점검하셨습니다. 또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된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온택트 사용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후 9월 3일 국회디지털 대책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9일부터 의원총회 및 기자간담회 등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압니다.

A. 그렇습니다. 16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카메라, 마이크 등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영상회의와 인터넷의사중계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Q.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영상회의가 가능한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의 경우 기존 멀티비전의 노후화로 올해 최신 LED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전 교체사업에 맞춰 영상회의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Q. 앞으로 입법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A. 입법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우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하루 빨리 구현할 계획입니다. 올해 1차 사업으로 지능형 입법정보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의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국회 디지털 대책신을 위한 과제가 도출·선정되면 그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원들과 힘을 합쳐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방향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언택트(Untact) 트렌드가 당연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그동안 등교수업을 전제로 학교 교육이 계획,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인한 변화와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고 학사 일정 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원격수업이 일상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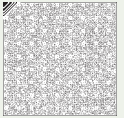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도 원격수업이 강화되고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는 안정적인 고 일원화된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콘텐츠 개발, 원격수업 방법 및 학생 평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초·중등학교 교육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적용에 따른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선 방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민용성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년·교과에 따른 원격수업 장점 활용 모색해야

첫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측면에서 학교급 및 학년 단계, 교과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의 유형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교과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활용 수업의 경우 지식 전달이나 반복 학습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토의 및 토론, 협력학습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시 각각의 수업 방법이 효율적인 교과 및 내용 영역을 추출하여 최소한의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영역에 대한 학습 방법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연관 교과 및 영역을 추출해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 교사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교 간 협력을 토대로 학년 및 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재구성, 온라인 교수·학습 자료 준비, 온라인 수업 진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교원이 여러 학생을 함께 수업하는 협력 수업(co-teaching)’을 통해 원격수업 자료 공동 제작 또는 개별 제작 후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식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원격수업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요

하다. 원격수업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의 본질에 충실한 방법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으로서 평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서술 및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해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수업에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초·중·고교에서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청의 지원 사항으로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원격수업 지원 목록’을 개발, 보급하는 것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적용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된다. 국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사들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화될 원격수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의 자기주도성 확립이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교육의 시행이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 교육 구성원들의 직접적 경험(User Experience)이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실질적인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와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다면 교육 혁신 과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진행형인 원격교육이 가져온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 향후 교육 혁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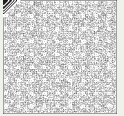
원격교육 경험으로 본 교육 혁신 가능성

먼저, ‘학교 교육’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렸던 이미지는 무엇일까?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딱 짜여진 수업시간표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원격교육은 제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유지는 더 이상 학교 운영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과, 인식적으로는 다양한 학습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이 되었다. 특히 원격교육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정보통신 기술이라면, 기술의 활용이 향후 교육 기회의 공정성 확보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 가능성을 가져온 것이다.

둘째, 원격교육이라는 다소 생소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수업 자료와 전략을 만들어 낸 주체는 선생님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직 경력, 직급을 떠나 동학년 차원에서 공동체가 만 들어졌고, 실행이 주도됐다. 정부 주도 교육 정책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고 해도, 점차 다양해지는 지역 상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김진숙 수석연구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확인됐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교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된 것이다. 이번 원격교육은 단순히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차원을 떠나 학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기회가 됐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학교 교육이 얼마나 대응하느냐의 문제는 모두의 과제가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려해야 할 교육 방향과 과제

최근 원격교육으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는 언론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정말 원격교육으로 인해 학력 격차가 일어난 것일까? 3년마다 이루어지는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검사(PISA)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과학, 수학, 읽기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인지하는 최상위의 학업성취는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더 못하게 되었지만 평균이 가져다 준 착각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만일 원격교육으로 학력 격차가 왔다면, 해

결 방법은 의외로 쉬워진다. 원격교육을 안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 해석에 현장의 교사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에 걸쳐 실시한 원격교육 실태조사에서 65%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력 격차의 원인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를 꼽고 있다. 정확한 문제 인식이자 해결 방안 제시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앞으로의 교육 혁신 방향은 명쾌해진다. 아이들은 각자가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존재이고, 그를 해낼 의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는 학교의 역할을 더 견고히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원격교육 경험으로 인한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삶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이번 원격교육에서 드러난 교육의 형평성, 학력 격차,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갈등 등도 기성세대가 고수해왔던 기존 제도의 한계와 인식의 문제다. 학생들의 주도성을 역량으로 길러내기 위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의 강화 등의 교육 혁신 과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확립하는 교육 비전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명의 문제이기도 하다. 🍵

NEWS

박병석 국회의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10월 26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 대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확연히 달라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모든 일은 평균인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에 대한 판단도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신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박 의장은 28일 김동훈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 디지털 혁신 역량 키울 것”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15일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국회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제1호 벤처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난 2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박병석 의장에게 보고했다.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총 32차례의 회의·간담회와 국회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과 IPU 등 해외주요보고서 및 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해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을 도출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발표된 아이디어들을 통해 국회 내 새로운 조직 마련 등 앞으로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격려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안일한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안 확정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700만 권 달성 행사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 권 달성 행사’에 참석했다. 박병석 의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해 국회는 디지털화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안고 있다”며 “앞으로 5년간 1천1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주요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에 1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었다”면서 “향후 5년간 진행될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홍범도 장군 순국 77주기 추모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7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독립전쟁 10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고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발굴하고 기록하고 예우하는데 국회도 역할을 하겠다”고

NEWS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는 흥범도 장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정예부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고, 민족의 기개와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당시 흥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요청하셨고, 올해 유해 봉환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장군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한러 수교 30주년 특별전시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2016년부터 시작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아 매년 주최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연기됐지만 내년엔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릭 주한러시아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12월 17일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10월 26일 국회의원사당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므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3년 9월 결성한 중견국 협의체로서 '므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준비위원회는 실무기획단장인 곽헌준 국제국장이 므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준비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므타 국회의장회의의 로고 디자인을 확정했으며,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제와 므타 회원국 의회의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의제 선정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준비위원들에게 "2015년 므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이후 5개 회원국을 모두 거쳐 두 번째 순환을 여는 우리 국회가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2기 므타 협력체'의 도약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며 "므타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적극 독려하고, 지도·감독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10월 29일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정치·경제 등 입법정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

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 및 일반 국민은 국회방송(NATV)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10월 29일 시작된 첫 강의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이순신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AI시대의 융합교육,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의 법칙 등을 주제로 열렸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인문학은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여유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예지를 주는 학문으로, 이번 과정은 인물·역사 등 전통적인 인문학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건축·심리 등 다양한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률용어 정비 추진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은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세 기관은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표현, 일본식 용어 등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선정된 416개의 법률

NEWS

용어를 대상으로 해당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663개 법률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어려운 용어나 일본어 투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같은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법률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갖추다면 효율성과 통일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디자인자문관에 정진열 국민대 교수 위촉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10월 15일 정진열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를 사무총장 직속 ‘국회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국회는 각종 인쇄물 및 시설물 등을 만드는 데 ‘디자인’에 대한 창의적 고민이 거의 없었다”며

“보기 좋은 국회가 국민이 다가서기 좋은 국회라는 점을 국회 직원들이 깨닫게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열 디자인자문관은 “국회사무처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의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열 자문관은 ‘국회 간행물 디자인 개선 TF’와 함께 국회 간행물 디자인 통합·개선과 국회 대표 월간지 ‘국회보’ 디자인 개선 등을 시작으로 국회 사무처의 디자인 관련 다양한 업무를 살필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한웅현 문화소통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AI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15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AI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식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AI와 국회포럼'의 네 번째 세미나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발제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노우진 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이지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채연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이신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순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론과 시사점을 짚어왔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정보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AI) 적용 현황 및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디지털 입법정보서비스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에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에산정책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 발간



국회에산정책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9월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은 2001년부터 추진됐으며, 생산액 증가와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과 같은 외형적 성장을 달성했고, 지난 1년간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의 유관산업에 미친 영

향을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세성 및 양극화,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애로, 대일 무역의존도 지속, 자체조달률 정체 및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하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주의 깊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은 '소재·부품 산업 및 시장현황',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정책 및 예산', '주요 정책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신 자료에 근거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1년부터 20년간 시행되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우려사항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지난 1년간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성과를 검토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15일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2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전국도민회연합의 지방소멸 관련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각 분야별 6명의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

NEWS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한상우 비즈인텔리 대표(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현재 전국도민회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의 목적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특단의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며, 개인 및 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 등 유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는 국세 분야의 심준용 명지대 교수와 5인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됐다.

토론자들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안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각자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 Foresight’ 등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표제: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호(표제: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를 각각 지난 9월 24일, 10월 15일 발간했다.

‘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 저자인 유재광 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미·중 경쟁이 한국의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호 저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이 해외 의회에 비해 활발하지만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임을 강조했다.



보조 용언 바르게 쓰기



용언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와 형용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눈다. 본용언은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면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이고,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용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어 버렸다”에서 ‘먹다’는 본용언이고 ‘버렸다’는 보조 용언이다.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 제5장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어 버렸다’라고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먹어버렸다’라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보조 용언을 붙여 쓰기 위해서는 본용언이 ‘아’ 또는 ‘어’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먹어 보다’나 ‘먹어 버리다’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다음으로 본용언이 관형사형으로 활용하되 보조 용언으로 ‘의존 명사+하다/싶다’가 쓰여야 한다. 즉 ‘먹는 체하다’, ‘먹는 척하다’, ‘먹을 성싶다’, ‘먹을 만하다’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끝으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

만 본용언이 명사형으로 활용하는 ‘먹었음’의 경우 ‘먹었음 직하다’의 형태도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보조 용언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본용언이 ‘아’ 또는 ‘어’로 활용할 때이다. 본용언이 ‘아’ 또는 ‘어’로 활용하더라도 ‘지워지다’나 ‘예뻐하다’처럼 보조 용언이 ‘지다’ 또는 ‘하다’인 경우에 그것이 자동사나 타동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없고 붙여 써야 한다. 아울러 ‘먹고 싶어하다’나 ‘마음에 들어하다’처럼 ‘아/어 하다’가 구(句)에 결합한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고 띄어 써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먹어 보다’는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것이 모두 허용되는데, ‘먹고 보다’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띄어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이미 복합어가 된 말은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굽어보다, 뜯어보다, 물어보다, 훑어보다, 쓸어버리다,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내드리다, 모셔다드리다’ 등은 이미 한 단어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참고로 ‘도와드리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와주다’가 한 단어이므로 이에 준해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글살이에서 발견되는 진짜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띄어쓰기 오류가 아니다. 굳이 보조 용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보조 용언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먹어 버렸다’ 또는 ‘먹어버렸다’라고 하지 않고 ‘먹었다’라고 해도 된다. 보조 용언 ‘버리다’는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버리다’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읽어 보다’ 또는 ‘읽어보다’처럼 단순히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보다’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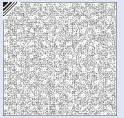
보좌관,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는 경험



이준우 보좌관
황보승희 의원실

골목길은 어두웠다. 전봇대 아래 서서 기다리기를 10분. 골목 안쪽에 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대학 동기의 소개로 다른 의원실 인턴을 만났다. 그는 “보좌관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라고 한참을 설명했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당시 난 금융회사에서 신입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나랑 맞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사주에 나랏밥을 먹을 팔자가 있다는 말을 아버지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 듯했다.

2003년 10월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했다. 13인치 모니터 앞에 앉아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하루 종일 한글파일에 옮겨 쳤다. 모두 옮겨 책으로 낼 거라고 했다. 당시 PDF 파일이 복사가 안 되던 시절이



었다. 가끔 사무실에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별떡 일어나 커피를 탔다. 한 달이 흘렀다. 출간 계획이 취소됐다. 아직 책을 낼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다. 한글 타자 실력은 올림픽대회에 나가도 될 만큼 성장해 있었다.

보좌관, 비서관 어깨 너머로 예산심사하는 법을 배우고 개정안 만드는 법을 배웠다. 다른 의원실 또래들과 어울리며 질의서 쓰는 법, 아이템 찾는 법도 배웠다. 기자들과 밥 먹을 때는 조금 달랐다. 보좌관과 기자들 틈에서 나는 말없이 귀를 종긋 세우고 소위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국회 밥을 먹었다.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인턴인데도 내가 쓴 보도자료가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 크게 보도됐다. 내가 쓴 질의서가 국회 속기록으로 영구 보존되는 것도 짜릿했다. 다른 의원실에서 영입 제의를 받았다. 인턴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최선을 다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했다. 2년마다 5급, 4급으로 승진했다. 순식간이었다. 10년 동안 8개의 상임위와 10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수차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뒷받침했다.

대학원 공부를 위해 국회를 잠시 떠났다 돌아왔다. 모시던 의원님은 해운대구청장 3선 출신으로 부산의 대표 도시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만들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의원님이 엘시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내게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으면서 출지에 해운대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예정된 실패를 향해 돌진했다. 무엇이 나를 이끌었는지 아직 모른다. 정신없이 결

승선을 지나 되돌아보니 남은 건 빛과 고치다 만 집이었다.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집수리를 했는데 수리업자가 철거만 하고 도주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때쯤이었다. 낙선, 사기, 아이가 동시에 찾아왔다.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 빙그레 웃었다. “아빠! 힘내” 하는 듯했다.

조국 사건 조사 경험으로 ‘조국홍서(紅書)’ 연재해

2019년 6월 광상도 의원실로 복귀했다. 1년 정도 쉬다 와서인지 머리는 더할 나위 없이 맑았다. 서울에서 집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의원회관에서 먹고 잤다. 우연히 조국 사건을 발굴했다. 사무실이 10층, 직원수면실이 9층이었는데 10층과 9층을 오가며 말 그대로 먹고 자며 조국 의혹에 집중했다. 기자 전화가 빗발쳤다. 오후 5시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을 정도였다. 그렇게 5개월 동안 방향을 잡았다. 광화문 집회에 불을 당겼고, 우리 사회에 ‘공정이란 무엇인가?’ 물음을 던져준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나와 함께 조국 딸의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불공정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는 ‘관훈언론상’을 받았다.

얼마 전 조국 사건의 상반된 입장을 담은 조국백서, 조국흑서가 나왔다. 기자와 동료들이 나에게 조국 사건의 진짜 이야기를 남겨달라고 했다. 단행본 출간을 생각했으나 현역 보좌관으로서 직장생활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지난 10월부터 한 월간지에 ‘조국홍서(紅書)’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는 경험은 흔치 않다. 낙선, 사기, 아이가 동시에 오는 드라마도 쉽지 않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서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 만들어가는 ‘멘토리’



권기효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

‘멘토리’는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93명의 청년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청소년들을 만나온 지도 벌써 10년 차가 되었다. 현재 지역은 ‘로컬’이라고 불리며 도시 청년들에게는 기회와 도전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떠나야 할 ‘지방’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멘토리는 농산어촌 청소년들에게 고향이 떠나야 할 곳이 아닌 기회와 도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청년을 마다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특히 소멸위험도가 높은 작은 도시들은 청년들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을 이야기 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외부’ 청년들을 쫓으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역의 청년으로 키우기 위한 장기 비전과 정책 설계는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큰 투자는 ‘장학제도’였다. 해외 연수, 학업지원, 등록금, 학숙까지 지원하는 이 장학제도는 지역의 인재라는 이름으로 좋은 대학교를 목표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로 떠나기를 장려하고 있다.

서울로 대학을 간 청소년들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서울권 대학에 가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 지역에서는 20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농산어촌 청소년 주식회사와 지역 청소년의 성장

멘토리는 공교육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공교육이 좋은 대학을 목표로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다면, 멘토리는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려고 한다.

농산어촌 청소년 주식회사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투자한 안전망 안에서 청소년들이 공부 아닌 새로운 재능을 찾고, 다시 청년이 되어 이 재능을 지역 안에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할 일’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농산어촌 청소년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3단계의 ‘험한 일’을 통해 청소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농산어촌 청소년들도 학교, 학원, 집의 굴레 속에 살고 있어 지역을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지역을 ‘탐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지역의 자원으로 ‘실험’하는 것, 마지막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에서 돈을 벌어보는 비즈니스를 ‘경험’하는 것, 3단계로 서울의 교육이 아닌 농산어촌의 자원만으로 청소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청소년들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두 가지 할 일을 만들고 있다.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Z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브랜딩하는 프로젝트로 강화의 단군신화를 바탕으

로 곶맛 도시락(쭈, 고수, 순무), 호랑이맛 도시락(장어, 돼지고기, 밴댕이)을 구성해 지역 기업과 함께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강화의 강추위와 갯벌을 살린 ‘얼어죽을 강화’라는 이름의 영화제를 기획하고 실행해 100장이 넘는 표를 매진시키기도 했다.

지역에 남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수동의 소셜 벤처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5일간 서울에 체류하며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을 배워 지역에서 6개월간 기업의 일을 진행하는 로컬 벤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스무 살부터 지역에 살아’가 아닌 ‘지역이 언제든지 돌아 올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경북 의성군이 지역을 마블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성을 한국을 넘어 세계로 알린 것은 5명의 컬링 국가대표 청년들이었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지역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행복해지고 싶은 도시의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다. 멘토리는 지역의 청소년을 청년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

금성에 생명체의 흔적이?

여러 나라가 화성 탐사에 매진하고 있는 사이에 금성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날아왔다. 망원경으로 금성의 대기를 관측한 결과 ‘포스핀’이라는 성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포스핀이란 인과 수소가 이루어진 분자인데, 목성과 토성처럼 땅이 없는 가스 행성에서만 찾을 수 있던 것이다.

지금까지 땅이 있는 행성에서 포스핀이 발견된 곳은 지구가 유일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명체다. 금성이나 지구처럼 수소가 부족한 곳에서 포스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미생물의 합성뿐이다. 즉, 금성 대기의 포스핀은 인류가 아직 모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나 생명체의 흔적이라는 뜻이 된다.

과거의 금성은 따뜻한 낙원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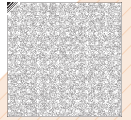
태양계 두 번째 행성인 금성은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특이한 행성이다. 크기는 지구와 거의 비슷하고, 표면 중력도 지구의 90% 정도다. 특이한 점은 자전주기다. 금성의 자전주기는 공전주기보다 길다. 하루가 1년보다 긴 셈이다. 그리고 지구와 회전 방향이 반대다. 어쩌면 과거에 다른 천체와 충돌하면서 회전 방향이 바뀌었을 지도 모른다.

관측 기술이 미비하던 시절에는 금성이 따뜻한 행성

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1960년대부터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한 결과 기온이 400도를 넘고 대기압이 지구의 90배 이상인 작열지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살고 있으리라는 기대도 수그러들었다. 기온이 이렇게 올라간 건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는 지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금성을 예로 들곤 한다.

포스핀 발견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뒤 금성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가 발표됐다. 다른 행성과 달리 원에 가까운 금성의 궤도가 과거에 어땠을지 시뮬레이션 했는데, 태양계 진화 초기에 목성이 금성에 접근하면서 궤도를 타 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 금성에 급격한 계절 변화가 생겨 물이 증발하고 수증기는 온실효과를 가속한다. 또 수증기는 자외선을 받아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가벼운 수소는 태양풍에 쉽게 날아가버리니 다시 물이 될 수 없다.

금성은 원래 바다가 있는 행성이었으나 목성 때문에 궤도가 바뀌면서 지금처럼 뜨거운 지옥이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자연히 금성 대기에서 발견된 포스핀이 금성에 바다가 있던 시절에 살았던 미생물의 흔적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떠오른다.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상상만으로도 흥미롭다.



인간이 지구 밖 생명체에 관해 상상한 건 오래전부터다. 달이나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깨져나갔지만, 아직도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남아 있다.

화성에서 날아온 운석 ALH8400은 잘 알려진 사례다. 1984년 남극에서 발견된 이 운석에서 화성의 미생물 흔적을 찾았다는 연구 결과가 1996년에 나오면서 크게 이목을 끌었다. 이후 이 운석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런 흔적이 비생물학적인 과정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운석이 지구의 물질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화성 생명체의 증거가 되지 못했지만, 우주생물학 역사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2010년에는 NASA 우주생물학연구소가 발표한 비소 박테리아 사건이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호수에서 생명체의 필수 원소인 인 대신 독성물질인 비소를 이용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인 대신 비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범위가 넓어지며, 지구와 다른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NASA가 중대 발표 예고까지 하며 거창하게 소개했지만, 아쉽게도 비소 박테리아는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다. 검증 결과 비소를 이용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비소가 많은 가혹한 환경에서 적응해 살던 생명체였다.

지구 밖 생명체 발견은 우주관을 바꾸어놓을 것

어느 머나먼 외계행성에는 기묘한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손은 아직 그런 곳까지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를 찾아온 외계생명체도 아직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으려면 일단은 태양계 안에서 증거를 찾는 수밖에 없다.

태양계 안에서도 아직 찾아봐야 할 곳은 많다. 화성에도 여러 탐사선이 가 보았지만, 극히 일부만 본 것에 불과하다. 과거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으니 그때 살았던 미생물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아직 있고, 과학자들도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또 하나의 유력한 후보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다. 유로파 표면은 영하 100~200도로 춥지만, 표면 아래에는 깊이가 100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다가 있다. 그리고 유로파에서는 목성의 조석력으로 인해 내부에서 지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해에는 뜨거운 물이 솟아 나오는 열수 분출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명체가 발생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번 금성의 포스핀 발견을 비롯해 계속 감질나게 하는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지구 밖 생명체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물론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드넓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질 건 분명하다. 🏠

글: 고희관(과학칼럼니스트)

왜 디지털 화폐인가



디지털 화폐는 요즘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는 주제다. 디지털 화폐가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른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미국 중심의 달러 경제 시스템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살려낸다는 것일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왜 미국이 불리해진다는 것일까. 그 맥락을 알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소비 유도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요즘 경기가 왜 나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들은 왜 소비와 투자를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다양하다.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돈은 있지만 미래가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 이미 충분히 소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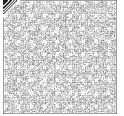
물론 기업들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는다면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기꺼이 그걸 소비한다. 돈은 빌리거나 훔쳐서라도 만들어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것은 매력적

인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소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으며 그게 경기가 충분히 좋지 못한 이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류가 생각해낸 최선의 해법은 금리 인하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또 낮춰서 이제 제로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제로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들어 있는데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면 사람들은 그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서 각자 서랍이나 금고에 보관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찾기 어렵고 찾은 현금을 절도나 약탈로부터 지켜내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는 제로금리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금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소비를 재촉하고 유도하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무슨 수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말인가. 금리가 제로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은행으로 몰려와 현금 인출을 요구할 텐데 말이다. 그러다 자칫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디지털 화폐의 장점과 고민

디지털 화폐는 이런 고민을 풀어줄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디지털 화폐는 전자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돈은 돈인데 오로지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돈이다. 이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 사람들이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디지털 화폐만 쓴다면 모든 디지털 화폐는 개인들의 계좌에 들어있을 것이고 돈을 주고받는 것도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부터는 각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매년 10%씩 저절로 줄어들 것임니다’라고 발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사람들이 계좌의 돈을 찾아서 다른 곳에 보관할 방법은 없다. 정말 돈이 점점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돈이 더 녹기 전에 사용하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강제 소비지만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니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해서 사용하면 좋은 점들이 또 있다. 이자율을 부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서로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계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1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플러스 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가난한 예금생활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도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고

중국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도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돈을 ‘이체’받는다고 하니 이미 사실상 디지털 화폐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더해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현금 발행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유일한 고민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다 드러날 경우 오히려 지하경제가 사라지고 소비나 투자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뇌물로 받은 돈으로 비싼 술을 마시거나 부모에게서 받은 목돈으로 집을 사거나 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술 판매도 줄고 주택 거래도 줄고 그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면 기축통화가 바뀔 수 있을까?

미국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 또 다른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인기를 얻어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안에서 ‘틱톡 머니’라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서 동영상에 감상해야 한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틱톡 지갑을 다운받고 거기에 틱톡 머니를 충전할 것이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틱톡 머니를 월급으로 주기 시작하고 기업들 사이의 거래도 틱톡 머니로 가능해진다면 틱톡 머니가 달러보다 더 유용한 화폐가 된다. 다른 곳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상품을 중국이 제공하고 그걸 구입하려면 중국산 디지털 화폐가 있어야 한다면 그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확산되고 전 세계 공용통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의 희망사항이고 미국의 걱정거리인 것이다. 🏠

글. 이진우(MBC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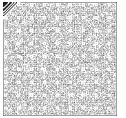


전북 전주 경기전 건물 지붕과 은행나무 단풍이 잘 어울린다.

은행나무 단풍길로 떠나는 시간여행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자만벽화마을까지 이어지는 조선의 역사

전주한옥마을의 가을 이름은 ‘은행나무마을’이라야 마땅하다. 한옥마을 주변 도로와 한옥마을 거리 등 곳곳에 은행나무가 많다. 특히 ‘600년 은행나무’와 전주 향교의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전주 향교 은행나무 고목들이 피워낸 노란 단풍잎이 오래된 향교의 한옥과 어울려 고풍스럽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오목대를 지나면 벽화로 유명한 자만벽화마을이 나온다. 산동네 골목에 그려진 벽화에도 가을이 깊다.



태조의 어진을 보고 단풍 물든 경기전을 거닐다

전주읍성의 남쪽 문인 풍남문은 전주한옥마을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출입문이다. 하늘로 깃을 올린 풍남문 처마가 은행나무 노란 단풍과 잘 어울린다. 가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은행나무 단풍 빛을 따라 경기전 앞에 도착했다.

경기전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는 곳이다. 정문 앞 하마비에 새겨진 문구가 단호하다. ‘사람들은 말에서 내리고 아무나 출입하지 말라.’ 조선의 문을 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진을 보관했던 건물은 개성, 영흥, 전주, 경주, 평양 등 다섯 곳에 있었는데 이곳 경기전 정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진왜란 때 모두 불에 탔다. 경기전 정전도 정유재란 때 불탔으나 1614년(광해군 6년)에 다시 세웠다.

어진 봉안의 삼엄함이야 없어진 지 오래지만 조선 건국의 상징성이 깃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는 마음은 남달랐다. 진품은 특별전이 열려야 볼 수 있지만, 모사품에서 풍기는 기운도 예사롭지 않았다.

어진을 보고 돌아선 얼굴에 가을 햇볕이 살갑게 내려앉는다. 단풍 물든 경내가 고즈넉하다. 푸른 대숲과 단풍이 대조적으로 어울린다. 몸 비틀며 자란 나무 한 그루가 견뎌온 세월. 단풍도 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예종대왕 태실과 태실을 알리는 비석 앞에 섰다. 태실 안 예종대왕의 태를 담은 항아리는 1928년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가져갔다. 1970년 파괴되어 있던 태실과 비석을 찾아 지금의 자리에 옮겨 세웠다. 이곳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곳은 여러 곳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춘추관, 충주, 성주 등지에 있던 사고는 소실됐다.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은 무사했다. 손홍록, 안의, 오희길, 김홍무, 수복, 한춘 등이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지켰기 때문이었다.



전주읍성의 남쪽 문인 풍남문



풍남문

경기전

전주 향교

오목대



전주 향교의 은행나무 단풍

자식 나무와 함께 가을 맞이한 ‘600년 은행나무’

경기전을 나와 태조로 은행나무길을 걷는다. 파란 하늘 아래 노란 은행잎이 많다. 투명한 공기는 빛의 산란을 돕고 잎마다 반짝이는 단풍 빛이 거리의 사람들을 물들인다. 사람들 얼굴도 은행나무 노란 단풍처럼 해맑다. 한차례 불어가는 바람에 단풍잎이 날린다. 한옥 담장과 거리에 단풍잎이 쌓인다. 수백 년 전 가을 그날도 이런 풍경이었겠다.

전주한옥마을에는 ‘600년 은행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사실 이 나무의 수령은 638년이다. 고려시대인 1383년(우왕 9년)에 최담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터를 잡을 무렵 심은 나무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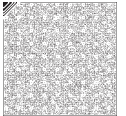
지난 2005년 나무 밑동에서 어린 은행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주변 은행나무의 씨앗이 이곳에 떨어져 자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두 나무의 DNA를 추출해서 관계를 알아봤는데 유전형질이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600년도 더 된 은행나무 고목은 그때부터 자식 나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600년 은행나무’와 그 자식 나무를 뒤로하고 전주 향교로 발길을 옮긴다.

전주 향교로 가는 길목은 지방 소도시 70년대 마을 풍속화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오래 된 집들의 낮은 지붕 위에 드리운 하늘이 도심의 그것보다 높아 보인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철이 벗겨지고 글자가 지워진 녹슨 간판에서 세월이 뚝뚝 떨어진다. 빛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빛나게 해준다.

그렇게 걸어 은행나무 단풍으로 유명한 전주 향교에 도착했다. 지금의 자리에 향교가 들어선 것이 1603년(선조 36년)이고,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 중 두 그루의 수령이 400년을 훌쩍 넘겼으니, 그 두 나무는 전주 향교와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나무 단풍을 보고 달동네 골목 벽화 앞에 서다

전주 향교는 원래 1441년(세종 23년) 경기전 근처에 지었다가 전주 서쪽의 화산 기슭으로 옮겼다. 성 밖에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1603년(선조 36년)에 전라감사 장만이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이곳에는 280여 년 된 나무부터 430년을 넘긴 나무까지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있다.

향교에 은행나무를 심은 이유가 가상하다. 은행나무는 벌레가 잘 슬지 않는다고 해서 관직에 나가서도 부정에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 향교에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일월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은행나무의 향연이 펼쳐진다. 대성전 앞마당과 명륜당 앞마당에 은행나무 고목이 있다. 은행나무 노란 단풍은 향교의 한옥과 잘 어울린다. 오후 햇살이 가득 퍼진 향교 마당에 앉아 은행나무 단풍을 본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은 햇살을 머금었다가 은은하게 오랫동안 발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목대로 오르는 길, 전망 좋은 곳에서 한옥마을을 굽어본다. 오목대는 고려시대인 1380년(우왕 6년)에 이성계가 남원, 운봉, 황산 등지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가는 길에 들러 종친들과 전승 축하잔치를 벌인 곳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고종의 친필로 새긴 비석을 세웠다. 당시 고종과 신하들이 나눈 대화가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다. 다음은 고종이 남긴 말이다.

오목대는 바로 태조 대왕이 남쪽을 정벌하고 개선할 때 머물렀던 곳이어서 그곳에 사는 늙은이들이 그 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돌담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하다. 선조를 찬양하는 도리로 보아 어찌 표지(表識)하는 예가 없을 수 있겠는가? 기문(記文)은 친히 지을 것이니...

오목대에서 육교를 건너면 이목대가 나온다. 이목대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가 살았던 곳이다. 오목대와 이목대가 있는 마을 이름은 자만벽화마을이다. 마을 골목길 담벼락을 그림으로 수놓았다. 마을 위 숲도 갈색 단풍이 물들었다. 숲의 단풍이 마을 골목길에 그려진 가을 풍경으로 이어진다. 왔던 길을 되짚어 풍남문으로 향하는 걸음에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전주의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은행나무마을'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있기 때문이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자만마을 달동네 골목길에 그려진
가을 풍경을 담은 벽화



170년 동안 이어온 감동의 스토리, 김정희 '세한도'



김정희 '세한도', 국보 180호, 1844년. 종이에 수묵, 23.7 X 109cm,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180호 '세한도(歲寒圖)'를 소장하고 있던 손창근 옹이 올해 1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시대 문인화의 걸작, 국보 중의 국보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하니,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두고 종종 이런 질문을 해본다. “세한도는 잘 그린 그림인가? 어찌 보면, 썰렁한 그림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세한도를 좋아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화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1840년 억울하게 유배를 가게 된 추사



는 1844년 서귀포 대정 유배지에서 ‘세한도’를 그렸다. 제자인 이상적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역관이라서 중국을 자주 드나들던 이상적은 중국에 갈 때마다 책을 구해 유배지로 보내주었다.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서화(書畵)였으니 이상적이 보내오는 책은 특히 더 값질 수밖에 없었다. 한날 유배객을 잊지 않고 중국에서 책을 구해 전해주는 가특한 제자. 추사는 그 변함 없는 마음을 기억하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세한도(歲寒圖)’라 이름 붙였다. 추운 시절을 견디는 그림이라는 의미다.

추사는 그림 옆에 그 동기와 의미를 적어 넣었다. 이어 화면 오른쪽 아래 구석에 사각형의 붉은 도장을 찍었다. ‘長母相忘’(장무상망).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이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뜨거운 마음이 그림에 절절하다. 시련을 감내하는 추사의 차가운 정신이 가득하다. 바로 문인화의 정신을 잘 구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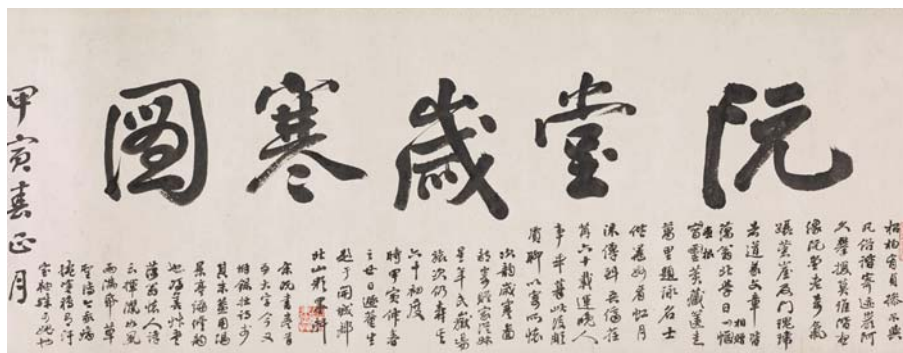
‘세한도’ 주인이 10차례나 바뀐 사연

그러나 ‘세한도’의 인기를 설명하기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세한도’의 드라마틱한 170년 여정이다. 추사는 ‘세한도’를 그려 제자 이상적에게 보냈고 이를 전해 받은 이상적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844년 가을 그는 이 그림을 가슴에 품고 중국 연경(지금의 베이징)에 갔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추사의 지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장악진, 조진조 등 16명의 글을 받아 그림 옆에 이어 붙였다.

세월이 흘렀다. 1865년 이상적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세한도’는 그의 제자였던 김병선에게 넘어갔고 이어 그

의 아들인 김준학이 물려받았다. 김준학은 이 작품의 중간과 말미에 감상기를 적어 넣었고 ‘완당세한도(阮堂歲寒圖)’란 제목을 두루마리 맨 앞에 붙였다. 그 후 휘문고등학교를 설립한 민영휘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이 1930년대 이 작품을 일본인 추사연구가 후지쓰카 지카시에게 팔았다고 알려져 있다.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교수였던 일본인 후지쓰카 지카시는 ‘세한도’를 처음 접하곤 그 자리에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세한도’를 구입한 뒤 그는 ‘세한도’에 흠뻑 빠져 늘 감상하며 지냈다고 할 정도다. 그는 ‘이 조에 있어서 청조 문화의 이입과 김완당’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도 했다. 1943년 봄, 후지쓰카는 ‘세한도’를 포함해 자신이 수집했던 추사의 서화 수천 점을 들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추사의 ‘세한도’가 이국 땅으로 유출된 것이다.

그 때 전남 진도 출신의 서예가이자 컬렉터인 소전 손재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재형은 당시 국내에서 손꼽히는 컬렉터였다. 1944년 여름, 42세의 손재형은 거금을 들고 도쿄로 건너갔다. ‘세한도’를 찾아오기 위해서였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도쿄는 밤낮 없이 계속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손재형은 물어 물어 도쿄 우에노에 있는 후지쓰카의 집을 찾아내 근처 여관에 짐을 풀었다. 병석에 누워 있는 후지쓰카의 집을 매일같이 찾아가 “세한도는 조선 땅에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작품을 넘겨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그렇게 두 달여. 드디어 후지쓰카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세한도’를 내주었다. 손재형은 거액을 지불하고 ‘세한도’ 등 추사 작품 7점을 찾아왔다. 1944년 말



세한도-완당세한도

또는 1945년 초의 일이었다. 손재형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세한도’는 한 줌의 재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이듬해인 1945년 3월 서화 작품들을 보관하던 후지쓰카의 연구실에 포탄이 떨어져 불이 났기 때문이다.

‘세한도’를 되찾아온 손재형은 1949년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오세창,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인 정인보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찬문을 받았다. 그 찬문들을 ‘세한도’ 두루마리 뒤에 이어 붙였다. 정인보는 ‘세한도’를 보고 “국보 그림 동쪽으로 건너가니 뜻있는 선비들 처참한 생각 품고 있었네. 건강한 손 굳이 한 손으로 교통과 싸웠네. 반전되어 이미 삼켰던 것 빼앗으니 옛 물건 이로부터 온전하게 됐네. 그림 한 점 돌아온 것이 강산 돌아올 조짐임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감격적인 발문을 썼다. 그런데 그 후 ‘세한도’는 한동안 사채업자에게 저당 잡히는 운명을 겪기도 했으나 눈 밝고 열정적인 개성 출신의 수집가 손세기의 손에 들어간 뒤 아들 손창

근 응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세한도’에는 이상적이 중국에 가져갔을 때 이 작품을 감상한 중국인 학자 16명, 한 때 작품을 소장했던 김준학, 손재형이 찾아왔을 때 이를 감상한 오세창, 정인보, 이시영의 글이 붙어 있다. 10명의 소장자를 거치고 19명의 찬문이 추가되면서 ‘세한도’는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축적했으며 그것은 ‘세한도’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 ‘세한도’를 그린 사람은 김정희였고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이상적이었지만 이들만으로는 ‘세한도’가 완성될 수 없었다. 10명의 주인이 있었기에, 특히 열정적인 컬렉터 손재형이 있었기에 비로소 온전한 ‘세한도’가 탄생한 것이다.

170여 년 동안 10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은 매년 극적이었다. 그리고 2020년 손창근 응의 기증에 따라 11번째 주인은 국민이 되었다. 놀라운 감동. 이것이 ‘세한도’의 진정한 존재의미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실시,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0. 10. 1. ~ 10. 31.

- 2**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 4** • 여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
- 5** • 정부, 한글날 집회 자제 요청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더불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련 법도 개정하자고 제안
- 7** •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실시...10월 26일까지
• 삼성전자, 자사 임원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 물의 공식 사과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다음 주부터 접종 재개하겠다"고 밝혀
- 8**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 12**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남한과 코로나 극복돼 손잡길 기원한다"고 밝혀
• 국회, 국가기관 최초로 수소전기버스 도입-운영
- 13** • 검찰,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문형국에게 무기징역 구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착용하면 최고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부실관리 질타
- 15** • 더불어민주당, '피감기관 특혜 수수' 박덕홍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 19** •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소 앞둔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 촉구
• 전국 초등 1학년 매일 등교, 전국 학교 등교 인원 2/3으로 완화
- 20** • 문재인 대통령, 잇따른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혀
- 21** • 금태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
- 22**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발생과 관련해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거듭 강조
•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업체 방문제 사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25** •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 26** • 문재인 대통령, "백신, 사망과 무관...독감 예방 접종 확대 필요"
•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대응 주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에 오염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28** •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위기에 강한 나라' 강조
- 29**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 확정

정리. 윤성혜

바람의 답;

국회 ART GALLERY 11월 작품전

발 달 장 애 인
작 가 3 인 이
들 려 주 는
희 망 의
☆ 이 야 기



2020.11.03 - 11.27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전시품 <차, 한국과 만나다> 등 회화 19점
작 가 강경원, 최주림, 하구은
주 최 국회사무처
주 관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추 천 이상현 의원실
문 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296



처음으로 '국회보'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국회라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따뜻한 시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국회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국회보가 되겠습니다.

● 한웅현 문화소통기획관

달력을 보니 입동(7일)과 소설(22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올 겨울 내릴 첫 눈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과 욕심들이 새하얀 눈으로 깨끗이 정화되었으면 합니다.

● 박기현 문화소통담당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어수선하게 보낸 2020년이 벌써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보팀에게 11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동시에 다음 해를 계획하는 달입니다. 좀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현아 취재보도사무관



대한민국 의정종합채널 NATV가 만듭니다

청소년 의회 프로젝트 우리들의 민주주의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민주주의



유튜브스타 크리에이터
도티의 통통 튀는 진행과
재기발랄 청소년들의
사이다 토론 배틀



토요일 오전 11시 방송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